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1. 들어가면서

예부터 전해 오는 말에 하루를 내다보는 사람은 꽃을 심고, 십 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과 나무를 심으며, 백 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사람을 기른다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근간임을 웅변으로 말해 주는 표현이다. 교육이 총체적으로 발전하여 훌륭한 지도자를 생산하려면 각급 학교의 교육이 충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진리 탐구와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개발하려면 대학교육이 잘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 연구 개발비의 지급 규모는 세계 랭킹 제8위에 이르렀지만 과연 대학의 교육 연구 수준이 이에 맞는 규모로 발전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캠퍼스를 우리나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말이다. 나라의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일부 교수들도 문제지만 공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세계 랭킹 50위 안에 들어가는 명문 대학이 별로 없는 가운데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학문으로 이름을 떨쳐야 할 우리나라 명문 대학에서조차 노벨상을 탔다는 학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권력을 지향하는 웹 폴리페서(정치 교수)는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는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초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가 깨끗하고 국민이 정직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러하며 우리 국민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언론 매체에 비추어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는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몇 가지 알려진 토착비리를 지적하면서 꼭 해결방안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반성의 자료로 삼았으면 한다.

2.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1) 대한민국은 대학공화국인가?

연전에 나는 스웨덴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나라 인구는 900만인데 종합대학교는 6개이

고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이 25개 있어서 모두 31개의 대학이 그 나라의 고등교육을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학 수는 얼마인가? 인구는 스웨덴의 5배가량 되는데 대학의 수는 무려 13배나 된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 분야 통계를 보면 대학교가 222개, 전문대학이 149개 등 총 371개가 개설되어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대학들은 최근 20년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설립 인가를 받은 사립대학들이다.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선거 유세를 다니면서 그 지방에 대학의 설립을 공약하고 그 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결과 시군 단위의 지역을 가보면 반드시 한두 개 이름도 들어본 일이 없는 무명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그런 곳에도 총장은 한 사람씩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총장 수는 시장, 군수의 수보다 많고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거지의 수보다도 많다고 풍자적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다.

2)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언제 어떻게 형성되나?

이렇게 만들어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대학의 시설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부지런히 공부를 하지 않는 캠퍼스의 풍토는 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량은 너무나 부족한 나머지 OECD 25개 국가 중 꼴찌라고 한다. 일부 명문 대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들어가기 어렵지만 들어가면 술 마시고 노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형성할 수 있으며 나라의 선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에 있는 몇몇 명문 대학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아직은 그 연구수준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마다 교수들이 집행하는 연구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은가?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나라 대학에서 발급하는 이상한 박사학위와 이상한 이름의 교수직

이른바 명문 대학교에서조차 박사학위를 남발하고, 이상한 명칭의 교수직을 임명하는 사례가 많거늘 하물며 지방 대학의 실정들은 어떠하겠는가? 요즈음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을 지낸 사람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겸임교수니 초빙교수니 하는 이상한 명칭의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정식 과정을 거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생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온 진짜배기 박사과 교수들이 자존

심 상해 하는 대목이다.

4) 반값 등록금은 과연 실현성이 있는 방안인가?

요즘 여야 정치인들이 앞 다투어 이른바 반값 등록금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다. 표를 의식해서 나온 발상이다. 한마디로 꼴값이요,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다른 나라 대학보다 비싼 면이 없지 아니 하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기가 가르칠 대학생을 선발하고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는 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맡겨 두어야 한다. 자칫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논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조정이다. 대학에 들어갈 학생의 수가 자꾸만 줄고 있는데 대학의 수는 계속 증가해 왔다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혹자는 우리나라를 ‘대학공화국’이라고 빈정대고 있는지 모른다. 가난한 학생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할 수 있으면 대학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정치인들의 선거에 이용되는 한심한 일은 없어야 한다.

3. 나라가 온통 썩었다

1) 계속 불거지는 권력형 비리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약칭 MB)이 국가 원로들의 얘기를 전한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깊게 그리고 널리 퍼져 있는 부정과 비리를 꼬집어 “나라가 온통 썩었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몇 사람이 어떻게 연루되었고, 얼마나 많은 감독기관 임직원들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이 해 먹었는지를 알 수 없는 권력형 초대형 비리사건이다. 여러 정권하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비리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그 은행을 이용하던 서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속히 도려내야 할 우리의 부끄러운 환부가 아닌가?

2)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일은 안하면서 수당이나 챙기는 국회의원

그런데 작금에 여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민 생활과 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최선을 다 하지 않으면서 무슨 특위다 무슨 특위다를 수 없이 만들어 별로 하

는 일은 없이 국회의원들은 특위 활동비 명목으로 수 십 억 원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살기 어려운 때에 세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여야가 말로는 그러지 말자고 하면서 여전히 국회는 점거 농성과 폭력 사태가 난무하고 있으니 불쌍하고 측은하기 그지없다. 이번에 한·미FTA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에는 최루탄을 터뜨리는 테러행위까지 자행되었다고 한다. 하늘 아래 이런 폭력 테러 국회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중요한 사학법, 의료법, 새해 예산안 등을 비롯하여 산적한 민생 관련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하니 차라리 이런 국회는 없는 것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나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양식의 회복이 절실히 요청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3) 공직자들의 토착비리와 직무태만

일부 공직자들이 근무 시간 중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도박이나 심지어 주식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또한 상당수의 국영 기업체 임직원도 이런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의 생계를 위하여 드러누울 자리를 준비하는 일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실제로 출장은 가지 않으면서 공무 출장비를 타 먹는 이런 수십 년 묵은 토착 비리는 도대체 언제 없어질 것인가? 그런데 6·25 전사자들의 보상비가 37년째 5,000원으로 묶여 있다고 한다. 왜 진작 이런 보상금을 현실수준에 맞게 인상을 하지 않았을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 동안 이런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생명 값이 고작 5,000원이란 말인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4) 운동선수들의 승부 조작사건

이런 가운데 정직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운동선수들마저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고 하니 너무나 실망스럽다. 순진한 선수들이 도박사의 농간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코 그렇지 않으리라고 철통같이 믿었던 운동선수들마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올가미와 덫에 걸려들었는지 한편으론 동정심도 간다. 이따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판·검사도, 세상이 다 썩어도 그래서 안 된다고 믿고 있던 교직자들도 부정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둘 데가 없게 만든다. 참담한 일들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 부정과 비리는 앞에서 말한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감독이 소홀해지면 부정 휘발유를 유통시키고, 버스의 단말기를 조작하여 서민들의 교통비를 착취하는가 하면 심지어 법원 공무원이 ‘인지’ 유출로 돈을 챙긴다고 하니 도대체 멀쩡하게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MB는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탄식을 했는지 모른다.

5) 고급 아파트에 사는 일부 노인들도 타고 있다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급여

들리는 바에 의하면 서울 장안에서 제일 비싼 초현대식 고급아파트인 타워팰리스에서 살고 있는 일부 고약한 노인들 가운데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급여를 타먹고 있는, 양심도 인격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또한 쌀과 같은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쌀농사를 짓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의 보상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내노라하는 일부 정·관계 인사들마저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이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 법원과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것을 본다. 사람의 양심이 썩으면 얼마나 썩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 얼마나 없는 것일까?

6) 땅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도덕심과 정직성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국민들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의 주변이 이러거든 하물며 일반 국민들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기초 질서를 잘 지키기를 어떻게 바라리요. 더욱이 어른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자라나고 있는 2세들에게 기초 질서의 확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7) 무너지고 있는 교권

그렇잖아도 요즘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는데… 도하 모든 언론매체에서는 “교권이 위태롭다”느니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사로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하며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 때 선생님이 야단을 치든지, 지금은 금지된 체벌을 가하든지 하면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며칠 전에도 학교 복도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학

생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어느 교감선생이 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어느 여자 담임선생님의 경우, 기가 막힐 성희롱도 당하기가 일쑤라고 한다. 종례를 마친 다음 둘러싼 남학생들이 교대로 선생님의 둔부를 만지기도 한다. 교실 환경이 이렇고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장래가 없는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이런 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진보 좌파 출신 교육감들에게 묻노니 이렇게 땅에 떨어진 교권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8)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허황한 공약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나 되고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발전한 우리나라가 여기를 지나 정말 강하고 행복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앞에서 열거한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이 말끔히 청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걱정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민주주의를 하자면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투표에서 이기려면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도 우선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또 다시 정치인들의 행태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선거에서 이기고 봐야 하니 온갖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서슴지 않고 내놓는다. 연전에 N 대통령은 충청도 표가 급한 나머지 수도를 충청도 공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다행히 이 엉뚱한 현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이 되었지만 결국 정부 부처의 대부분이 그리로 이전하는 역사적 과오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후에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비즈니스 벨트의 건설 등 굵직굵직한 공약이 나왔고 그 건설 위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치논리로 시작해서 정치논리로 결론을 내고야 마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L 후보는 공약의 하나로 747이라는 걸 내세웠다. 내용인즉 7% 경제 성장에, 4만 달러의 국민소득에, 세계 7대 교역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그 L 대통령이 이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목하 대국민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치인들의 이런 허황한 공약은 하루 속히 추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9) 무상 급식, 공짜 의료, 반값 등록금

최근에는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무상 급식, 공짜 의료,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와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킨다.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가를 먼저 살핀 다음 그런 공약을 하는 것이 아

니고 우선 공약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무모한 작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런 정책을 펴나가던 일본, 그리스, 이태리, 터키 등이 모두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새삼 짚어 보아야 할 감언이설이 아닌가 싶다. 이런 국민들의 복지증진에 나라의 재정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늘어나는 국방비, 교육비, 과학기술 R&D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선진국에 이르려면 모든 개발 복지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 각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누고 베푸는 값진 삶을 누리게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조상들이 피땀으로 가꾸어 온 이 나라를 더욱 부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로잡고 각종 부정과 비리는 걸모습일지라도 흉내 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노교수의 기우 섞인 염원이 꼭 성취되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언제 이런 날을 보게 될 것인지 나의 남은 날이 모자랄 것이 염려스럽다.